“아직 끝나지 않았다…애도·기억 넘어 성찰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행사

정부·국회·시민 1200명 참여…광주·전남 추모 사이렌
내일 서울 보신각·27일 광주 5·18민주광장서 추모대회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179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전 국민 추모의 장이 마련된다.

애도의 시간을 넘어 참사의 원인을 되짚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성찰과 다짐으로 이어지는 이번 추모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기억하라 12·29’를 중심 주제로, ‘막을 수 있었다’, ‘살릴 수 있었다’, ‘밝힐 수 있다’라는 3가지 세부 주제를 통해 참사의 책임과 교훈을 되새기는 데 초점을 뒀다. 단순한 추모를 넘어 진상 규명과 항공 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의지를 확인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공식 추모식은 참사 발생 1주기인 오는 29일 오전 10시, 사고 현장인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다. 정부와 국회 관계자, 유가족, 사고 수습 참여자, 일반 시민 등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다.

이에 앞서 참사가 발생한 시각인 오전 9시 3분에는 광주·전남 전역에 1분간 추모 사이렌이 울려 퍼지며, 지역사회 전체가 희생자를 함께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본 행사에서는 희생자들이 생전에 주고받았던 메시지와 여행 사진을 바탕으로 참사 당일의 타임라인을 재구성한 주제 공연이 진행된다. 또 참사 1주기를 맞은 유가족들의 시선을 담은 영상이 상영돼, 남겨진 이들의 아픔과 질문을 사회가 함께 마주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추모 행사도 이어진다. 20일 오후 2시 서울 보신각과 27일 오후 2시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각각 시민 추모대회가 열려, 희생자를 기억하고 안전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이 모아질 예정이다.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22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주요 공항과 관공서에는 분향소가 조성돼 국민 누구나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다.

유가족을 위한 치유와 연대의 시간도 별도로 마련됐다. 20일부터 29일까지 유가족들은 추모 버스를 타고 서울, 인천, 대전, 울산, 부산 등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활동을 이어간다.

24일에는 무안공항에서 ‘유가족의 밤’ 행사가 열려, 추모 카드 작성 등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연대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22일부터 무안공항 곳곳에는 참사 당시를 기록한 사진과 희생자를 기리는 전시가 진행된다.

공항 1층에는 참사 기록과 희생자 사진, 유품이 전시되고, 2층에는 179켤레의 희생자 신발과 함께 추모객들이 안전에 대한 다짐을 남길 수 있는 ‘안전 서약의 벽’이 운영된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임명 철회

의회 인사청문 결과·여론 등 고려…직무대행 체제 운영

광주 북구가 자질 논란에 휩싸인 이현수 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의 임명을 철회했다.

18일 북구에 따르면 나기백 전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사임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지난 9월부터 후임 이사장 임명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후보자 모집을 진행해 면접 점수가 가장 높았던 이현수 후보자를 이사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구의원 재직시절 배우자가 운영하는 꽃집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꽃을 구청에 납품해 지방계약법을 위반, 윤리특별위원회의 공개사과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 지난 2022년에는 대선을 앞두고 무소속 구의원 신분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지난 10일 북구 공무원 노조는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고, 16일 열린 북구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부적격 의견이 채택됐다. 해당 내용이 담긴 경과보고서가 18일 북구에 송부됐다.

북구는 이 같은 인사청문 결과와 지역사회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여, 해당 후보자를 이사장으로 최종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을 유지하게 되며, 공단 운영은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북구의회 인사청문 결과와 지역사회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판단”이라며 “이사장 공석으로 인한 공단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18일 광주 동구 남광주시장 상인회건물에서 열린 민선8기 광주구청장협의회(회장·임택 동구청장) 회의에 참석한 5개 구청장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구청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역사적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광주 시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이강 서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임택 동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구청장협의회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환영”

‘대한민국 균형발전 성공 모델’ 자리매김 기대

광주 5개 구청장들이 광주 군 공항의 전남 무안 이전 합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구청장협의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광주·전남의 숙원 사업이었던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역사적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광주 시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는 ‘주민지원사업 1조원 조성’, ‘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과 연계한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이 제시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 자치구는 △이전 및 개발 계획에 대한 주민 설명과 의견 수렴 △생활권 변화에 따른 교통·주거·교육·환경 등 일상 분야의 세밀한 점검 △공항 이전 부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 계획과 단계적 활용 방안 마련 △주민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생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현장 중심’ 행정 지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은 광주와 전남이 상생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간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며 “국가 정책과 보조를 맞춰 협력과 연대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가 ‘광주와 전남의 상생 모범 사례’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교육부, ‘서울대 10개 만들기’ 의견 수렴

오늘 전남대서 현장간담회…거점국립대 육성 등 논의

교육부가 지역 거점국립대 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관련해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선다.

교육부는 19일 전남대학교에서 지방대학 동반 성장을 위한 서남·전북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과정의 하나로, 지역 거점국립대를 집중 육성하고 지방대학 간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달 말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가칭) 수립을 목표로 대학·산업계·연구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경북대학교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산학일치 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거점국립대를 지역 전략산업의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다른 지방대학들도 대학별 특성화와 대학 간 공유·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특성화 지방대학 관계자들은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학사구조 개편, 취·창업 교육 강화, 대학 간 협업 모델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거점국립대가 교육과정과 교원, 연구 장비 등 핵심 자원을 지역 대학과 적극 공유하며 기초·교양 분야와 첨단 분야에서 협업하는 전략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전남대 AI(인공지능)융합대학 교수와 학생들을 만나, 거점국립대가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지적장애인 등치고 성범죄 누명 씌운 50대 실형

자신이 고용한 지적 장애인 직원의 재산을 빼앗은 범행이 들통나게 되자, 다른 여직원을 시켜 성범죄자 누명을 씌운 50대 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무고교사,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B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업체 대표 A씨는 아르바이트생이던 B씨에게 지적장애인 C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대상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C씨가 입었을 정신·재산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대법원,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국가적 중요성·신속 처리 등 고려
위헌 논란 차단…무작위성·임의성 원칙 유지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 해당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일각에서 위헌 우려가 제기되자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행정회의를 통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예규 설치는 이날 오전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이라면서 “법안에 조금이라도 위헌을 문제 삼을 소지가 있다면 피고인 측 위헌제청, 기피신청 등 절차적 주장을 할 여지가 있는데 그럴 경우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 그러한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예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절차 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돼온 사무분담과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부칙으로 정한 적용 범위는 예규 시행 이후 공소 제기(기소)된 사건이다. 항소심의 경우 항소가 제기된 사건까지 포함된다. 이를 고려할 때 현재 진행 중인 내란·외환 관련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각급 법원장은 이들 대상 사건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고, 해당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

핵심 내용으로 꼽히는 배당에 관해선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도록 했다.

기존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및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 및 배당 예규’에 우선해 적용된다.

전담재판부가 맡은 사건은 전부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심리 사건의 시급성과 업무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예외를 둘 수 있다.

또 대상 사건의 관련 사건 배당은 관계 재판부 협의를 거쳐 실시하고, 관련 사건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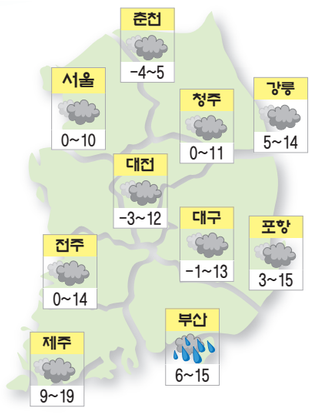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

당장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내란 사건 항소심의 경우 서울고법에서 전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전담재판부 수를 정하면 모든 재판부에 무작위 배당을 실시해 배당받은 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정해진다. 재판부 기존 사건은 재배당하고 신규 배당은 중지된다.

임영진 기자·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뜸	07:36	달뜸	06:58
해짐	17:23	달짐	16:23



광주	1~16
목포	4~14
여수	6~14
순천	2~14
구례	-2~15
해남	1~16
완도	3~15
흑산도	10~17
고흥	-1~14
진도	6~15

미세먼지 확인하세요!

광주 / 전남

목포	밀물(고)	01:05 / 14:04
	썰물(저)	06:35 / 19:31
여수	밀물(고)	08:56 / 20:40
	썰물(저)	02:04 / 15:02

HIV 감염 숨긴 20대 ‘실형’

만년필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져.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31일 HIV 감염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피임도구 등 감염 예방기구 없이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

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다른 질병에 걸리게 되자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HIV 감염임을 알게 됐다고.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마약범죄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아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